

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금융위원회 | 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자 료</h1> | | | 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 |
| | 보도 | 배 포 시 | 배포 | 2018.12.19.(수) |

| |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책 임 자 |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손 영 채(02-2100-2680) | 담 당 자 | 김 영 근 사무관 (02-2100-2693) |
| |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 박 세 환(02-6050-0168) | | 최 현 덕 팀 장 (02-6050-0166) |
| |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1본부장 조 연 주(02-3145-0331) | | 황 근 식 연구위원 (02-3149-0328) |

- ② 종속기업·관계기업에 대한 이익 배분비율 결정 관련 기준 신설 (K-IFRS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)
- (기존) **K-IFRS**와 달리 일반기업회계기준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기업의 회계처리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 → 회계기준원은 K-IFRS 등을 고려하여 관련 질의에 대해 수차례 회신
 - (개정) 회사의 이익을 종속기업·관계기업의 실질적인 소유권*에 비례하여 배분할 것을 규정
 - * 콜옵션, 풋옵션, 총수익스왑 등의 거래로 종속기업, 관계기업에 대한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접근가능한 경우
- ③ 중소기업특례에서 공동기업의 지분법 적용 면제 규정화
- * 종전에는 관계기업 외 공동기업에도 지분법 적용이 면제될 수 있는지 불명확

2.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주요 제·개정사항

- ① 「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」 해석서(K-IFRS 제2123호) 제정
- (기존)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*에 법인세 등을 산정할 때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
 - * 예: 기업이 국세청에 추징세액을 납부한 후 소송을 통해 그 일부나 전부를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결과가 확실하지는 않은 경우
 - (내용) 과세당국이 기업의 법인세 회계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(probable)에 따라 관련 과세소득 산정방법 등을 판단
 - (수용가능성 高) 법인세 신고와 일관되게 산정
 - (수용가능성 低)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, 기댓값
- ② 「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」(K-IFRS 제1028호) 개정
-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관련 금융상품 중 장기투자지분* 등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은 **IFRS9**에 따라 평가
 - * 우선주, 장기수취채권, 장기대여금 등 미래 상환가능성이 높지 않은 항목
- ③ 「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」(K-IFRS 제1115호) 개정
- 수주산업 계약에 따른 수익의 인식단위를 계약기준(예: 건설)으로 하여 해당 수익이 매출의 5% 이상인 경우에 주식에 공시

3. 회계감사기준 개정

- (배경)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('18.10.30일 공포)에 따라 회계감사기준에 내부회계관리제도* 감사기준을 포함하고, 그 밖에 불명확한 표현 등 정비

* 회사의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임의성을 최소화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내부통제시스템

- (내용)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(PCAOB: Public Accounting Oversight Board)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도입

<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 주요 내용 >

-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
-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 경우 부적정 의견 표명, 감사업무 범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의견거절
- 재무제표 감사에서 발견된 중요한 왜곡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의 지표로 고려하는 등 재무제표 감사와 연계하여 감사 수행

4. 품질관리기준 제정

- (배경) 외부감사법 개정('18.11.1일 시행)으로 '05년부터 공인회계사회가 자율규제로 운영해오던 품질관리기준의 법적근거가 마련됨

- (내용)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(IAASB: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)가 제정한 국제품질관리기준서(ISQC1: International Standards on Quality Control 1)에 외부감사법령을 반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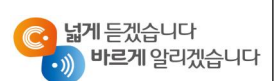
< 국제품질관리기준 주요 내용 >

- 회계법인의 경영진 등 품질관리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자의 책임
- 감사인의 독립성 등 윤리적 요구사항 준수에 필요한 내부통제
- 감사업무를 수임 또는 유지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
- 감사업무수행 인력 및 품질관리 인력의 운영 등
- 감사업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업무방식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가 일반기업회계기준

가. 외감법령 개정에 따른 연결범위 변동 등(문단 4.3, 4.4, 4.8(1), 8.35, 32.3 개정)

가-1. 연결범위

- (기존) 외감법령에 따라 소규모 종속기업 등을 연결범위에서 제외
- (개정) '18년 외감법령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, 일반기업회계 기준에서도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지배하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

가-2.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

- (기존) 중간지배기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결재무제표를 면제하였으나,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외감법령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
- (개정) '18년 외감법령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으나, 여전히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 외감법령 내용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직접 명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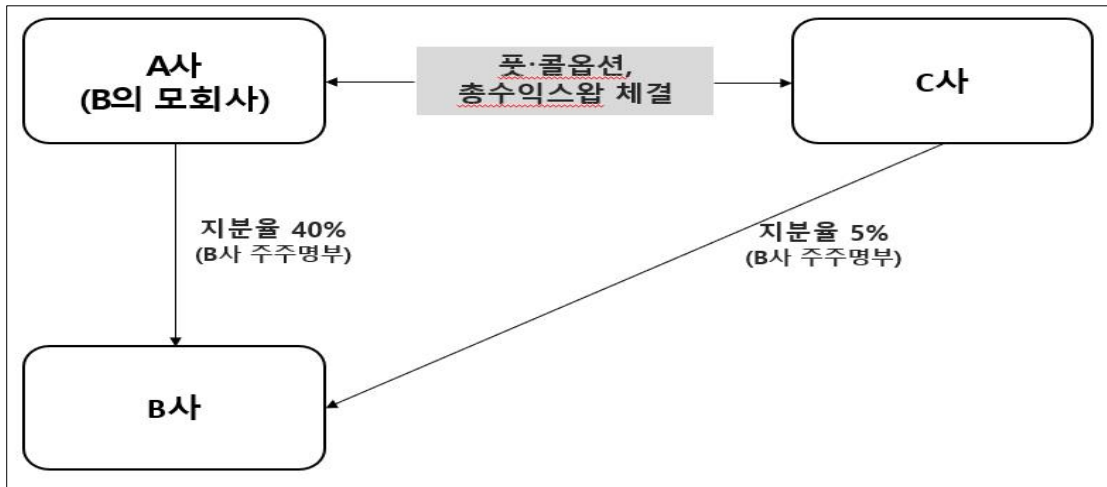
나. 종속기업·관계기업에 대한 이익 배분비율을 결정할 때, 실질적인 현재의 소유권*을 고려한다는 규정 신설

* 현재의 소유권이란? 주주명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외관상의 지분율에 불구하고, 콜옵션, 풋옵션, 총수익스왑 등의 거래로 관계기업, 종속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 피투자기업의 순자산 변동에 투자기업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권리

- (기존) 명확한 규정 없음
- (개정) 종속기업·관계기업에 대한 이익 배분비율을 실질적인 현재의 소유권에 비례하여 배분하도록 명시

□ **(거래 예시)** 현재의 소유권을 적용한 거래 예시는 다음과 같음

거래 개요



- **A사와 C사가 체결한 풋옵션, 콜옵션:** A사는 C사로부터 B사 주식을 특정 시점에 확정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(콜옵션)을 갖고, C사는 A사에 B사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(풋옵션)를 가짐
- **A사와 C사가 체결한 총수익스왑:** A사는 C사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가로, B사 주식의 가격변동위험, 배당에 대한 권리, 의결권 등을 C사로부터 가져옴
- 따라서 A사와 C사 간에 체결한 풋옵션, 콜옵션, 총수익스왑 계약에 따라, A사는 B사 주식에 대한 **위험과 효익**(B사 주식의 가격변동위험, 배당권, 의결권 등)의 대부분을 보유

거래 분석

| 구분 | 외관상 지분율 (B사의 주주명부) | 실질 지분율 (현재의 소유권 고려)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A사 | 40% | 45% |
| C사 | 5% | 0% |

(결론) A사가 B사의 이익을 가져올 때 사용하는 지분율은 **B사의 외관상 지분율인 40%**가 아닌 A사가 B사에 행사할 수 있는 **권리를 고려한 45%**를 적용

다. 리스개설직접원가의 정의 개정(제13장 용어의 정의, 문단 결13.19~13.20, 결13.26 개정)

- (기존) 리스개설직접원가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서 제조자·판매자인 **운용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도 제외되는 것처럼 오해*** 소지

* (개정 전) 리스의 협상 및 계약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분원가. 다만,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제외

- (개정) 제조자·판매자인 **금융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만 제외됨***을 명확히 함

* (개정 후) 리스의 협상 및 계약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분원가. 다만, 금융리스인 경우에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제외

라. 명예퇴직금 회계처리 명확화(제21장 용어의 정의, 문단 21.4, 14.2, 실2.47 개정, 문단 21.5의3, 결21.23~21.24, 실21.1~21.2 신설)

- (기존) 명예퇴직금 등의 회계처리 지침 부재
- (개정) **해고급여 개념을 도입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, 다양한 형태의 명예퇴직금 등을 경제적 실질*에 따라 퇴직급여 또는 해고급여(퇴직급여 외의 종업원급여)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명시**

* 명예퇴직 신청 시 기업의 정책(과거 지급사례, 실무관행 등을 고려)

- ① 명예퇴직을 대부분 승인하고, 일반퇴직금 외에 특별퇴직금을 추가 지급
: 종업원은 기업이 특별퇴직금 지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함
→ 일반적인 퇴직금과 경제적 실질 유사 → 퇴직급여 회계처리

- ② 기업의 제반여건에 따라 임의로 특별퇴직금의 지급을 결정
: 해당 지급액은 기업과 종업원 간 근로계약관계 종료 대가로 지급하는 추가적인 급여 → 해고급여와 경제적 실질 유사 → 해고급여 회계처리

마. 법인세 처리가 불확실한 경우 회계처리 명확화(문단 22.2의2, 실22.26, 결22.13 신설)

- (기존)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*, 기업이 산정한 법인세 비용보다 추가 납부한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할지에 대한 지침 부재

* 예: 기업이 국세청에 추정세액을 납부하고 그 가운데 일부나 전부를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결과가 확실하지는 않은 경우

- (개정)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, 제14장(충당부채, 우발부채, 우발자산)이 아니라 제22장(법인세)을 적용함을 명확히 하고, 그러한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하는 경우와 방법을 설명

바. 중소기업특례에서 지분법 적용 면제 규정 명확화(문단 31.6 개정)

- (기존) 지분법 적용 면제 규정에서 관계기업만 명시하여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면제 여부가 불명확하였고
 - 종속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규정을 개별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에서도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
- (개정) 지분법 적용 면제 규정 적용시 공동지배기업도 지분법 적용 면제 가능함을 명시하고,
 - '종속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한다'는 문구를 삭제하여 개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은 지분법 적용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

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

가. K-IFRS 제2123호 ‘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’ 제정결과

- 기업의 법인세 처리(기업이 법인세 신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는 처리)를 과세당국(법원 포함)이 수용할지가 불확실할 때의 측정 방법을 규정
 - (검토 단위)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개별(항목별)적으로 고려할지, 집합적으로 고려할지를 판단(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하는 방식 선택)
 - (가정) 과세당국은 조사권한이 있는 만큼 모두 조사할 것이고, 조사 시 관련 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고 가정(과세당국의 조사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음)
 - (과세소득 등*의 산정 방법) 과세당국이 기업의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‘가능성이 높은지(probable)’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법인세 관련 회계처리를 수행

* 예: 과세소득, 미사용 세무상결손금·세액공제, 세율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과세당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| ⇒ | 기업이 법인세 신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는 법인세 처리와 일관되게 산정 |
| 과세당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| ⇒ |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 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* ② 기댓값 |

* 가능한 결과치가 두 가지이거나 하나의 값에 집중되는 경우에 사용

- (재검토) 판단이나 추정의 기초가 된 사실 및 상황이 달라지거나 새로운 정보*가 입수되면 판단이나 추정을 재검토

* 과세당국의 조사나 조치, 과세당국의 규칙 변경, 과세당국의 조사 권한 만료 등

나. K-IFRS 제1019호 ‘종업원 급여’ 개정결과 보고

- (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) 퇴직급여제도(확정급여제도)의 개정, 축소, 정산이 있을 경우 그 시점의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와 갱신된 보험수리적 가정을 적용하여, 다음을 반영한 순확정급여부채(자산)^{*1}를 재측정
 - ① 개정, 축소, 정산 전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^{*2}와 사외적립자산
 - ② 개정, 축소, 정산 후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^{*2}와 사외적립자산

*1 (1) > (2) → 순확정급여부채(과소적립), (1) < (2) → 순확정급여자산(초과적립)

(1) 퇴직(확정)급여채무의 현재가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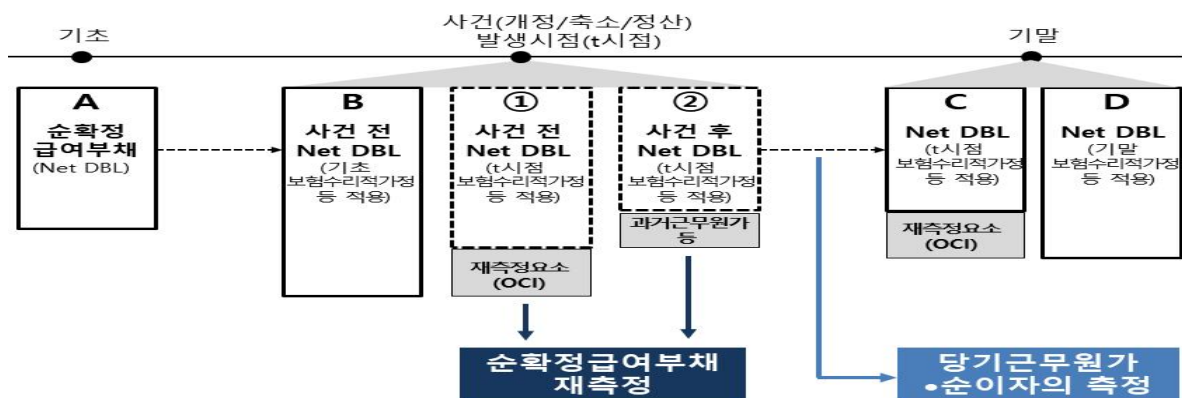
(2)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

*2 기업이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급여채무와 관련

□ (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액의 측정) 위 ②에 따라 재측정한 순확정급여부채(자산) 금액과 재측정을 위해 사용된 사외적립자산 금액 및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,

○ 제도의 개정, 축소, 정산 후 잔여 보고기간 동안의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액을 측정

<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 및 당기근무원가·순이자액 측정 >



① 개정, 축소, 정산 전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와 사외적립자산을 반영하여 재측정한 순확정급여부채 → 사건 전 Net DBL(순확정급여부채)

② 개정, 축소, 정산 후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와 사외적립자산을 반영하여 재측정한 순확정급여부채 → 사건 후 Net DBL(순확정급여부채)

⇒ ①과 ②의 차이 : 과거근무원가(제도의 개정이나 축소), 정산 손익

⇒ 사건 발생 후 기간(t~기말)에 대한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액은 t시점에 갱신된 보험수리적 가정과 재측정된 순확정급여부채(②)를 이용하여 산출: ② → C

< 참고: 관련 용어 설명 >

- ① (퇴직급여제도) 기업이 한 명 이상의 종업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근거가 되는 공식 약정이나 비공식 약정. 확정급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
 - 확정급여제도: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금액이 종업원의 임금과 근무연수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 → 종업원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기업이 부담
 - 확정기여제도: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금액이 기업이 납부하는 부담금*과 그 투자수익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(종업원이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) → 부담금 납부 후 기업이 종업원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 없음
- *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, 통상적으로 종업원 연간 임금의 1/12 이상
- ② (개정) 확정급여제도를 도입 또는 철회하거나, 기존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급여를 변경할 때 발생
- ③ (축소) 확정급여제도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 수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때 발생 (예: 공장폐쇄, 영업중단, 제도의 종료나 중단)
- ④ (정산)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생긴 급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법적의무나 의제 의무를 기업이 더 이상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거래
- ⑤ (과거근무원가)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로 인한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변동 중 종업원이 과거 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에 해당하는 부분
- ⑥ (순이자) 시간경과에 따라 생기는, 보고기간 동안의 순확정급여부채(자산) 변동
- ⑦ (정산손익) ①과 ②의 차이로 측정
 - (1) 정산일에 결정되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
 - (2) 정산가격(이전되는 사외적립자산과 정산 관련 기업이 직접 지급하는 금액 포함)

□ (자산인식상한효과) 확정급여제도의 개정, 축소, 정산으로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손익을 인식할 때에는 자산인식상한효과를 고려하지 않고,

-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손익을 인식한 후, 자산인식상한효과를 결정하여 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

< 참고: 자산인식상한효과 >

□ 자산인식상한*을 초과하여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초과적립액

* 초과적립액(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> 확정급여채무)이 발생할 때, 재무제표에 순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한도

(예시)

| 구분 | 금액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확정급여채무 | 1,000 |
| 사외적립자산 | (1,500) |
| 초과적립액 | (500) |
| 자산인식상한효과 | 100 |
| 순확정급여자산 | (400) |



다. K-IFRS 제1028호 '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' 개정결과

- (적용범위의 명확화)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금융상품으로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, **K-IFRS 제1109호 '금융상품'**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함
- (장기투자지분에 대한 손상규정)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금융상품 중 장기투자지분*의 손상 회계처리는 **K-IFRS 제1109호**를 우선 적용한 후,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순투자자로서 **K-IFRS 제1028호**를 적용함
 - * 우선주, 장기수취채권, 장기대여금으로서 예측 가능한 미래에 상환받을 계획도 없고 상환가능성도 높지 않은 항목

라. K-IFRS 제1109호 '금융상품' 개정결과

- (금융상품에 원리금 특성이 있는지 대한 판단) 대여금 조기상환시 거래상대방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는 약정이 있더라도, 그 금액이 계약의 조기상환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라면 그 금융상품을 원리금 특성이 있다고 판단
- (금융부채 조건변경·교환의 회계처리) 금융부채의 조건이 변경되거나 교환 되더라도 현금흐름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, 금융자산의 경우와 일관되게 회계처리*한다는 점을 결론도출 근거에 명시하였음
 - * 금융부채의 조건이 변경되거나 교환되더라도 현금흐름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, 조건변경 또는 교환으로 인한 상각후원가 장부금액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
- 회계처리에 필요한 근거가 회계기준에 충분히 있으므로 기준서 본문을 개정하지는 않음

(사례) 부(-)의 보상이 발생하는 중도상환 가능한 회사채

(거래) A사(채권자)는 20X1.1.1에 B사(채무자)가 발행한 회사채C(액면 100원, 만기 5년, 이자율 10%)를 100원에 취득

□ 중도상환시점의 계약상 남은 나머지 현금흐름을 그 시점의 기준 금리(benchmark rate)변동이 반영된 이자율*로 할인한 금액으로 언제든지 중도상환 가능

* 중도상환시점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산출하는 할인율과 상이할 것으로 예상

- ('x2년 초에 A사가 조기 상환(기준금리 최초 대비 하락(8%))) B사는 계약을 조기청산 시켰음에도 불구하고, 91원(x2년 초의 당초 상각후원가)이 아닌 99원(8%의 기준금리로 나머지 현금흐름을 할인한 금액)을 B사에게서 받음

➔ **A사가 계약을 조기청산 시켰음에도 불구하고, 상환 받는 금액이 원리금보다 크지만, 이러한 부(-)의 보상이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**이라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임

- ('x2년 초에 B사가 조기 상환(기준금리 최초 대비 상승(12%))) B사는 계약을 조기청산 시켰음에도 불구하고, 91원(x2년 초의 당초 상각후원가)이 아닌 84원(12%의 기준금리로 나머지 현금흐름을 할인한 금액)을 A사에게 지급

➔ **B사가 계약을 조기청산 시켰음에도 불구하고,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원리금보다 작지만, 이러한 부(-)의 보상이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**이라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임

※ 개정안에서는 기존 IFRS 9의 '합리적인 추가 보상'에서 '추가(additional)'를 삭제 함으로써, 어떠한 원인으로 조기상환 되었는지에 관계없이 합리적인 보상으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

마. K-IFRS 제1115호 '수익' 개정결과

□ **(공시대상 명확화)**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공시대상이 되는 단위를 수행의무(예: 설계, 조달, 시공)가 아닌 계약단위(예: 건설계약)로 결정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,

-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시하도록 함

바.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5-2017 연차개선

① 지배력 획득 시 기존 보유 공동영업 지분의 회계처리 명시(제1103호 문단42A)

- (종전) 공동영업(사업의 정의 충족)당사자^{*1} 또는 참여자^{*2}가 지배력을 획득한 경우, 기존 보유 지분(자산·부채)에 대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중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불명확

*1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당사자

*2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

- (개정) 공동영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시 회계처리 규정 신설
 - 공동영업 관련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(사업의 정의 충족)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이므로,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

② 공동지배력 획득 시 기존 보유 공동영업 지분의 회계처리 명시(제1111호 문단 B33CA)

- (종전) 공동영업 당사자가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, 기존 보유 지분(자산·부채)에 대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중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불명확
- (개정)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 획득 시 회계처리 규정 신설
 - 공동영업 당사자가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, 해당 지분의 성격이 변경되더라도 연결실체의 범위나 측정 요구사항에 변경이 없으므로 이전에 보유하던 공동영업 관련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음

③ 배당의 법인세효과 회계처리 규정 명확화(제1012호 문단52B 삭제, 문단57A)

- (종전) 배당의 세효과 인식시점 및 인식항목에 대한 규정은 배당 이익과 미배당 이익 세율이 다른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또는 자본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에 대한 지급^{*}이 이익의 분배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가 불명확

* 예)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는 신증자본증권에서 발생한 이자 지급

- (개정) 배당의 세효과 인식시점 및 인식항목에 대한 규정은 배당의 법인세효과 모두에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으며,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원래 인식하였던 항목에 따라 당기손익,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

4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 명확화(제1023호 문단14)

- (중전) 적격자산^{*1}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였으나, 자산이 의도된 용도로 사용(또는 판매) 가능하게 되는 경우^{*2} 해당 차입금을 일반차입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

*1 의도된 용도로 사용(또는 판매) 가능하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

*2 이러한 적격자산에 대해서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

- (개정)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(또는 판매)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면,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은 일반차입금에 포함